

단독과반 새누리 벌써 민심 역행?

김형태·문대성 득장대처에 여론 악화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론도 거센 비판

4·11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이 민심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 전 보여줬던 '비장함'이 사라지고 총선 승리와 대권 대세론에 취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제수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김형태 당선자와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 처리 문제에 대해 미온대처 하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총선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사실관

계 확인 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16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 당이 (결정) 할 테니까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선제 대응을 주문한 이준석 비대위원 이외의 다른 당 지도부 인사들도 나아가기 못했다.

하지만, 한 방송이 17일 성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의 남성 음성과 김 당선자의 목소리를 전문가에 의뢰해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동일인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도하자 '윤리위 회부 및 금주 내 출당 검토'로 입장을 급선회했고, 김 당

선자는 결국 18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 때나 올해 초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당시 즉각적으로 수사의 회를 하고 특검까지 요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 관계자는 "조치가 너무 늦었다. 여론만 악화됐다"고 말했다.

문 당선자의 논문표절 및 대필 의혹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당은 아직도 문 당선자의 '결단'을 압박하기보다는 국민대학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당 지도부가 문 당선자 건에 대해서도 제때 대처하지 못해 여론만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당내 일부 인사들이 제기하는 결선 없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추대하자는 주장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에 대선주자로서는 박 비대위원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사실상 총선이 결선을 가를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 개인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실제 선거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승리로) 판단을 받은 만큼 대통령 후보 경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 '박근혜 대세론'에 취해 당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갈 수 있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의 측근 안효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비대위원장이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듯이 주변에서 떠드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대선 필패로 가는 길"이라며 "과거 이회창 전 총재 시절에 얻은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치권 보수대연합 연대 빨라지나

與 '과반 턱걸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 어려워

새누리당이 4·11총선에서 거둔 턱걸이 과반이 정치권의 보수대연합을 재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대선이 보수-진보진영 후보의 양자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세(勢) 결집이 요구되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은 일부 당선자의 탈당으로 과반 의석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짧게는 민생법안이 걸린 19대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길게는 12월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보수 성향의 자유선진당과의 합당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18일 성추행 의혹 논란에 휩싸인 김형태 당선자의 탈당으로 새누리당의 의석은 151석으로 줄었다. 여기에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가 탈당할 경우 150석으로 감소된다. 특히 19대 국회부턴 과반 이상의 제1당이 독자적으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몸싸움방지법안)은 여야간 쟁점법안의 처리에 전체 의원의 60%인 재적 5분의3 이상(181석)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현기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유선진당과

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건전한 보수세력이면 분화될 것이 아니라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게 좋다. 급급적 빠르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독자 정당으로 남는다는 방침 하에 5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나, 정가에서는 새누리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이다.

선진당의 최대주주인 이회창 전 대표는 총선에서의 보수연합에는 부정적이었으나 대선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보수대연합을 논할 시기가 되면 보수의 가치에 동조하는 어느 세력과도 협조하거나 상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새누리 탈당 논문 표절 의혹 문대성 "탈당 안한다"

성추행과 논문 표절 의혹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김형태·문대성 당선자가 18일 잇달린 행보를 보였다.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아 온 김 당선자는 자진 탈당했고,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인 문 당선자는 탈당을 거부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를 통해 "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법적 문제를 마무리한 뒤 사랑하는 당과 존경하는 박 위원장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당선자의 탈당 결정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당의 입장이 하

밤 새 크게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 당선자는 "탈당하지 않을 것이며 (표절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국민대의 심사 결과 발표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당선자는 김 당선자의 탈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탈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취재진이 쫓아가 기자회견 취소 이유를 묻자 문 당선자는 "(탈당이 아니

라) 논문 표절이 아니라는 말을 하러 왔다. 보도자료를 보냈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김 당선자의 사퇴로 19대 국회 과반(151석)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문 당선자의 탈당을 막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 당선자의 탈당 의사 번복에 따라 새누리당의 도덕성 논란에 따른 이미지 실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총선 압승으로 대선가도에 탄력을 받았던 박 위원장에게도 적지 않은 '약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문대성 기자회견 취소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새누리당 부산 시하갑 당선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창사60주년을 축하합니다

독자와 함께 60년의 세월을 기록해 온 광주일보 한발 빠른 뉴스와 심층 취재로 더 성장하는 오피니언리더. 더 발전하는 광주일보의 60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삼보주유소 | 설 총 산업 | 진 원 상 사 | 진 원 산 업 | 예 림 사 | 아그파코리아

문대성 기자회견 취소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새누리당 부산 시하갑 당선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KTX 무안 경유·F1 질의 전남도의회 23일부터 임시회

전남도의회는 오는 23일~5월 4일 제26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의와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의회에 새롭게 입성한 의원 4명의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게 된다.

또 전남도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전남도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전남도립학교설립이실 동의안 등 2건

의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KTX 무안 경유 문제와 F1 등 전남도의 현안 사업과 문제를 질의하게 된다.

임시회 기간 동안 총복과 강원 등지에서 여수세계박람회 홍보하고, 완도 청산도와 구례군 공도장 주변 등을 시찰하는 현지활동도 결정여진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한·베트남 FTA 내일 서울 공청회

협상개시용 절차 진행

우리나라의 15대 교역국인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외교통상부는 한·베트남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양국간 FTA 추진 필요성과 협상 추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고, 재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2010년 6월부터 14개월간 이뤄진 양국간 공동 연구에서 FTA가 체결되면 두 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15위 교역 대상국이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에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국가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대베트남 교역에서 흑자를 지속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 '4·11총선 평가' 잇단 토론회

광주YMCA·광민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4·11 총선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 YMCA는 19일 오후 3시 광주동구 금남로 YMCA 대강당에서 '4·11 총선 평가와 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90차 시민논단'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연 광주YMCA사회이슈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류한호 광주대교수, 윤

영덕 전남대 연구교수, 서정훈 광주 NGO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정을 하게 된다.

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권 패배의 원인으로 친노 486 중심의 계파공천과 낙동강 벨트가 중심이 된 선거구도, 여권연대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도 오는 23일 시민정치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광민회 사무실에서 '제19대 총선 평가와 교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北 "안보리 의장성명 전면 배격"

북한은 17일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 내용 등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하고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또다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해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유린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침란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밝

혔다.

외무성은 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 강화하고 정치위성을 포함해 경제발전 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